

‘청년의 생각, 청년일자리 정책으로’ 고용노동부, 청년과 함께 일자리 해법 모색

- 김영훈 장관, 구직·재직 청년 30여명 및 전문가들과 청년 고용 해법 자유토론
- 일자리, 노동환경, 생활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2027년 예산사업 등에 반영

고용노동부(장관 김영훈)은 3월 5일(목) 14시,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년 온(ON)라운지에서 「청년 일자리 정책 타운홀미팅」을 개최하고 구직·재직 청년 및 청년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청년 고용 해법을 논의했다.

이번 행사는 최근 청년 고용 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정책 당사자인 청년의 체감과 정책 간 간극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.

행사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구직 청년과 국민취업지원제도, 일경험, K-디지털 트레이닝 등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. 또한, 대학내일 정은우 소장,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김봄이 박사, 마음AI 박유빈 총괄, 삼성청년 SW·AI아카데미 황영주 프로, 서울고용센터 정여진 컨설턴트 등 청년 전문가 5명이 함께 참여하여 정책 조언을 제공했다.

행사는 청년들이 미리 제출한 제안을 토대로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, 참석자들은 ▲일자리 지원, ▲노동환경 개선, ▲소득·주거 등 생활 지원 분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.

먼저 일자리 지원 분야에서는 인턴·일경험 성과를 공식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‘직무역량 인증서’ 도입 필요성이 제안되었다. 직업훈련·자격 등 청년의 다양한 역량을 종합적으로 증명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. 노동부는 관련 제도의 구체적 설계를 검토해 2027년부터 직무능력 인정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살펴보기로 했다.

또한, 재직·구직 청년이 현직자와 연결되어 실질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멘토링 기능을 강화하고, ‘청년미래플러스사업’의 온·오프라인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.

* 산업계(협·단체)와 협업하여 구직청년에 대한 실무 중심 컨설팅, 직무교육, 멘토링 등 취업 지원과 재직청년의 산업 내 성장(직장내 훈련, 경력설계 등)을 지원

노동환경에 대해서는 취업한 청년들이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입직 초기 직장 적응 지원이 필요하고, 중·고등학교 재학 단계부터 조기 진로탐색 및 노동관계법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들은 깊이 공감했다.

소득·생활 분야에서는 청년 주거지원 확대, 청년 재직자 보증금 대출 요건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,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보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.

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“오늘 청년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제안들을 많이 해 주셨다. 일자리 문제는 취업뿐 아니라 주거 등 청년의 삶의 문제까지 같이 고민해야 한다.”라면서, “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여 올해 만드는 고용노동부 예산에 청년 여러분의 정책 제안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이번 타운홀미팅은 유튜브 ‘고용노동부 공식채널’과 ‘김영훈 TV’를 통해 전체 생중계되었고, 다시보기도 가능하다.

담당 부서	청년고용정책관 청년고용기획과	책임자	과 장	최윤미 (044-202-7440)
		담당자	사무관	김형우 (044-202-7636)

